

제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 개최

- 공정거래질서와 자율준수 중요성을 인식, 확산하는 자리로 정착 -

지난 4월 1일, 제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이 중견기업연합회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후원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계, 학계, 법조계, 정부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해 유공자 22명에 대한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 노력을 치하했다.



소비자보호 분야에 공이 큰 손경한 변호사(약관심사자문위원)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시장경쟁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단국대학교 경제학부 강명헌 교수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정착에 공이 큰 제너시스와 하도급거래 선진화에 기여한 정소영 하도급자문위원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기업내 정착에 기여한 현대해상화재보험 김승환 부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태평양 백정기 부사장 등 14명이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공정위 강철규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카르텔이나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 부당한 독과점 유지·강화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한편, 경쟁제한적인 정부 규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시장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선진시장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금년에는 시장에서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 보호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한 “경쟁촉진 주체로서의 소비자 역할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이익은 물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구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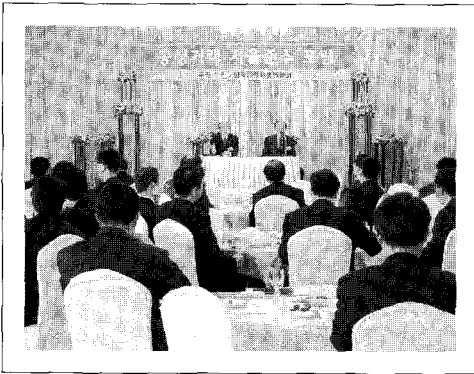
이번 행사에서는 새로 개정된 공정거래법·시행령이 시행되는 날을 맞아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도 마련됐다. 발표자로 나선 공정위 윤수현 서기관은 카르텔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 그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이 정부직접규제에서 시장자율방식으로 바뀌어가는 시장개혁 정신을 담고 있음을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질서와 이의 자율적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확산하는 자리로 정착되고 있는 '공정거래의 날' 행사는, 2002년 4월 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질서경제학회 등 다수의 민간단체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의 자율적인 확산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4월 1일을 '공정거래의 날'로 지정, 선포하고 매년 교대로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제8회 자율준수포럼 개최

- (사)한국공정경쟁연합회, 공정위 조학국 부위원장 초청 강연 -



당 연합회는 지난 3월 22일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기업의 자율준수관리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자율준수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자율준수포럼은 공정거래위원회 조학국 부위원장을 초청해 최근의 공정거래 현안 및 과제와 자율준수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강연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되는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공정위의 역할은 선진시장경제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제반 규정을 확립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있다”고 발표를 시작한 공정위 조학국 부위원장은 시장경제의 효율 증대와 소비자후생 증대를 위한 기업 부당공동행위(카르텔) 방지와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 등을 통한 경쟁촉진, 하도급법 적용대상 확대와 중소기업의 교섭력 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으로 대·중소기업간 거래 관계의 개선, 소비자정보제공 확충 및 소비자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경쟁촉진 주체로서의 소비자 역할 강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 또한 '사전심사청구제'의 조기 정착, 사건처리 및 심리절차 개선, 평가와 성과관리의 유기적인 연계 강화 등 올해 공정위의 3대 혁신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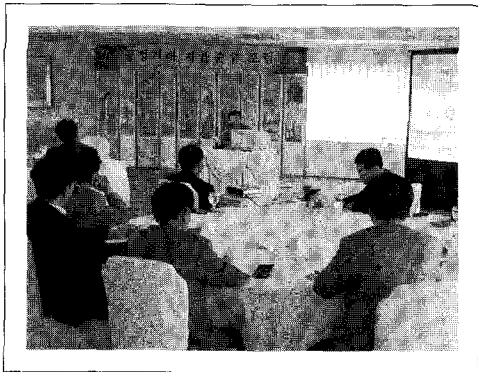
발표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사전심사청구제도의 심사청구 이후 30일

이내 처리규정의 단축, CCMS(소비자피해구제시스템) 등을 비롯한 소비자보호정책에 관한 정부부처내 업무 중복에 대한 기업 부담, 표시광고의 소비자 오인성에 대한 객관적 기준 설정, 각 기업별 내부거래위원회에 대한 효율적 운영 기조 마련,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공정거래법 법체계 개선과 공정위의 업무 개선방안 등에 대한 질문과 건의가 활발하게 논의됐다.

한편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한 기업은 2004년 193개 업체였으며, 올해는 도입 업체 수를 25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제9회 자율준수포럼 개최

- 공정위 이동규 정책국장 초청 강연과 포스코의 CP 활동 소개 -



당 연합회가 주관하고 (주)포스코가 후원한 제9회 자율준수포럼이 지난 4월 15일~16일 양일간 포스코 광양제철소내 백운대에서 개최되었다.

공정위 관계자와 해당 기업 자율준수관리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자율준수포럼은 포스코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 소개와 함께 선진국의 공정경쟁 관련 정책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한

공정거래위원회 이동규 정책국장의 초청 강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15일에 진행된 포스코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브리핑에서 강창균 실장은 “포스코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초기에 도입하고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1996년 공정거래 준수편람을 최초로 제작했고, 작년에는 하도급 공정거래 준수편람을 제작·배포하는 등 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행동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공정거래 교육 과정을 개발해 관련 임직원에게 교육하고, 자체적으로 자율준수 예방감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업무 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날 진행된 초청 교육에서 공정위 이동규 정책국장은 “최근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카르텔을 저지하고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경쟁 관련 정책을 보완·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하고 “특히 가격담합, 생산·출고량의 담합, 입찰담합 등의 경성카르텔의 당연규제 이외에도 카르텔 적발 후 과징금 부과액의 대폭 상향 조정과 처벌 내용의 가중, 그리고 행정당국의 카르텔 강제 조사 및 집행권한 부여 등 카르텔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또한 “과거 GE와 Honeywell의 기업결합 사례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끼워팔기’ 사례에 대한 미국과 EU의 상이한 심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결합을 판단하는 기준이 각 국가마다 다르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과 공정거래법 적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장내 공정경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공정위가 심사절차상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기업도 공정경쟁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 및 활성화 등을 통해 자율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광양제철소 견학을 비롯한 문화탐방의 시간을 갖고 친목을 다지기도 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작성

본 연합회에서는 각 회원사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공정거래 관련 자율준수편람을 업종에 맞게 작성해 드리고 있으니,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작성 계획이 있으신 각 회원사는 상담 및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본 연합회 준법지원실 TEL. (02)775-8870~2 / FAX. (02)775-8873